

기획 - 박종환 총재 <매일경제> 인터뷰

##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빼면 국가정체성 훼손... 생산적 보수 될 것”

박종환 총재가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이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맞춰 합리적 이면서도 생산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총재는 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인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우리 사회 가치관 정립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 보수가 위기라고 하는데.

“한국의 보수는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을 봉쇄하면서, 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후 한국 보수는 이기주의의 길을 걸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와 나누는 데 인색했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 부(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자 광풍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의 밥상을 먹여치우는 우를 범했다.”

### • 지난 대선, 현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보수 궤멸을 외쳤다.

“보수궤멸은 극단적인 말이고, 나는 한국 보수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본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극은 한국 보수의 자գ심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지만, 결과적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보수가 부와 속도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동행이라는 진정한 보수적 가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됐다.”

### •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자총이 추구할 가치는.

“좌우의 극단적 이념 대립보다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중용의 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국리민복이라고 생각한다. 국리민복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그 판단의 최고 기준을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에 둔다는 뜻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절실한 철학과 가치는 없다. 과거와 같은 이념 대립과 색깔 논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포용적이고 온정적인 보수의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 • 국리민복이란 말이 조금 모호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공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지지층인 진보진영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비판을 무릅쓰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국리민복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세대갈등, 인구절벽, 빈부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총은 앞으로 국리민복을 기치로 가치관 정립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 지난 정권에서 자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임 총재는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적 중립은 자총의 시대적 과제이다. 자유민주주



의의 지상과제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파의 노선만을 대변하는 데 있지 않다. 인간의 존엄 및 자유와 관용의 미덕을 담은 우리 헌법의 숭고한 가치가 그대로 우리의 노선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자총 내 정치중립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또 자총의 활동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공론화 과정도 거치도록 할 것이다.”

### •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잦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얼마 전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자총에서 관련해 규탄 성명을 냈다. 자총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지만 정부 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벗어날 경우 이번처럼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 • 문재인정부가 외교·안보를 잘하는데 경제에서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 현장에 대한 정부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보완하지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맞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취지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러한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

### •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잘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자총 회원들이 회담 당일 아침에만 해

도 이 정도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환송까진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 등 회담 결과를 보고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플래카드를 만들고 청와대로 나갔다고 하더라. 그만큼 자총 회원들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반긴 것이다. 문 대통령을 맞으러 다녀온 회원들이 “문 대통령이 우릴 보고 자동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고 얘기하더라.(웃음)”

### •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 보수단체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반긴 이유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는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때 미국 측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 분위기였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자총의 가치에 부합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 싶다.”

### • 자총 총재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이지만, 자총 총재인 본인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가 대립에서 공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지만, 특히 이를 받아들이는 보수층의 변화는 가장 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가 말로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기를 띠고, 완전한 핵 포기과 전쟁의 위험이 실효적으로 제거되었을 때, 그리고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통행이 자유롭게 이뤄질 때, 그래서 북한에 대해 안심하며 동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질 때 비로소 변화된 북한을 받아들일 것이다.”

<매일경제 (2018. 5. 10)>